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자



金聖順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계의 2차례에 걸친 집단폐업사태는 우리 나라의 허술한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의료공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병원 중 민간병원의 비율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도 전체의 9.8%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80% 이상인 유럽과 매우 대조적이다. 국민건강을 개인책임으로 간주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현재와 같이 개업의 중심의 자유경쟁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저소득 시민에게는 병원문턱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 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생명을 담보로 집단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가 수시로 표출될 가능성도 적잖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수가를 통한 간접통제만이 가능하여 이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움직이려면 필요 이상으로 수가를 인상하여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비롯한 국민건강을 위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를 성취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또 노인

응급의료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및 장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멀지 않은 장래에 급격한 의료비 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중증 질환의 집중적인 예방과 비용절약형 의료공급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혼합방식으로 개편하여 이윤추구 중심의 의료행위에서 탈피시키고, 단계적으로 공공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시 발생할 의료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를 양적으로 대폭 늘려 공공의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지역의 경우 일종의 도시형 보건지소인 '주민건강센터'를 시·구 단위로 인구 5~10만명당 1개소로 확충하여 싱가포르의 폴리 클리닉(Poly-Clinic) 형태와 유사하게 공공보건사업과 진료 등 지역사회의 평생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주민건강센터'는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일부를 활용한다면 설치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투자비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인건비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면 유휴 의료인력을 상당부분 흡수하고 공공보건의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특사업비 등을 활용, 기존

보건지소의 질적 수준을 높여 현재까지의 단순진료에서 포괄적 보건의료 제공기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주민건강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법인' 설립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건법인은 공공기능을 가진 민간보건의료기관으로, 기존의 진료기능에 공공보건사업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는 법인이다.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예를 준용하여 의료기관 기능은 의료법인과 같이 독립채산제로 하고, 공공보건사업 기능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각 지역에 종합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민간 병원을 인구에 따라 몇 개 선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점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거점병원, 특수질환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도 광역거점병원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폐업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